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MIDDLE MARKET ENTERPRISES POLICY BRIEF

FOMEK

vol.8 2022.8.1~8.31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-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(8.8)
 - 중견련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
 - (주요내용) ▲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확대 ▲상속·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▲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▲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9건
-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(8.24)
 - 윤창현 의원실, 최재형 의원실, (사)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, 중견련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주관한 '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' 개최
 -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상속세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, 상속세제 개편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, 일자리 창출, 투자활성화 등 경제 발전의 선순환 방안 모색
- 기획재정부 제1차관, 기업승계 중견기업 방문 (8.31)
 - 정부가 중견기업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,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견련과 기획재정부는 기업승계를 통해 세대 간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(주)와이지-원을 방문
 -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,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, (주)와이지-원 송시한 대표, 중견련 박양균 정책본부장이 참석하여 기업승계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 논의

정책동향

- [금융위원회] 사업재편 금융지원 강화 (8.3)
 -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「기업활력법」에 따른 사업재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선별을 강화하고, 사업재편기업 전용 대출·펀드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실시 예정
- [금융위원회] 업무보고 실시 (8.8)
 - 금융위는 '위기 선제 대응 및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'을 주제로 업무보고 실시
 - * (위기 선제 대응) 취약계층 보호, 금융시장 안정,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
 - (위기 넘어 성장) 금융산업 디지털화, 자본시장 재도약,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

- [관세청]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(8.11)
 -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▲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,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(연말), ▲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(연말), ▲특별통관 지원(10월) 등 긴급 행정지원 실시
- [공정거래위원회]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·배포 (8.12)
 - 공정위와 중기부가 각각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정·배포
 - * 주요 내용·양식은 동일하나,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, 용어 등 일부 상이
- [공정거래위원회] 업무보고 실시 (8.8)
 - 공정위는 ▲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▲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 ▲시장 반칙행위 근절 ▲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▲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 실시
- [고용노동부]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(8.17)
 -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*별 35개 기업사례를 담은 「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」 발간
 - * ① 경영자 리더십, ② 근로자 참여, ③ 위험요인 파악, ④ 위험요인 제거·대체·통제,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, ⑥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, ⑦ 평가 및 개선
- [산업통상자원부] 2022년 2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(8.23)
 -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에 필요한 선도기술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고 향후 3년간 12개 R&D·실증과제에 대한 213억원 규모의 지원계획 발표
- [공정거래위원회] 말레이시아 경쟁법·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(8.24)
 -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 및 최신 법 집행 사례를 담은 설명 책자 발간·배포
-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(8.26)
 - 민간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연구개발 생산성 혁신을 위해 ▲연구산업 시장규모 확대(40조원, '25년) ▲1,000억원 이상 전문기업 수 증가(10개, '25개) ▲국산 연구장비 비중 확대(20%, '26년) 등을 목표로 4개 추진전략 및 14개 추진과제를 담은 '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('22~'26) 발표
- [기획재정부]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(8.26)
 - 범부처 TF를 통해 경제 형벌규정의 비범죄화, 합리화를 추진 중이며,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에 대한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
- [산업통상자원부]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(8.30)
 - 반도체,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,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3년 예산안* 10조 7,437억원 편성
 - * (기본방향) ▲반도체·미래차 등 첨단·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▲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▲수출활력 제고,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등

- [국토교통부]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(8.31)
 - 연 500억불 수주, 세계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'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'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

입법동향

1 정부

- [국토교통부]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(8.2)
 - 건축물 해체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된 「건축물관리법」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8.4일부터 시행
 - (주요내용) 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 및 허가대상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, 해체계획서 작성 책임자 지정 및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이수 의무화, 허가권자의 점검 권한 및 관리 업무 감독 수단 강화 등
-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(8.2)
 - 연구전담인력 재택근무 허용, 기업연구소 설립·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·운영과 관련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(기초 연구법)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.4일부터 시행
- [산업통상자원부]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(8.3)
 -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 지원을 확대·강화하는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(국가첨단전략산업법)」이 8.4일부터 시행
- [고용노동부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(8.9)
 -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후속조치로 마련된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안 8.18일부터 시행
- [공정거래위원회]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(8.10)
 -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「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」 8.11일부터 9.20일까지 입법예고
 - (주요내용)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범위 축소(혈족 6촌·인척 4촌 이내 → 혈족 4촌·인척 3촌 이내),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 등
- [환경부]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(8.30)
 -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'순환자원 인정기준'을 기존 11개(법률 2개, 시행령 9개)에서 2개*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('22.8.31~'22.10.11)
 - * ① 소각·매립되거나 해역(海域)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, ②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

2 국회

●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 의원, 8.2)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

* 신성장·원천기술 : (현행) 중소 12%, 중견 5%, 대 3% → (개정) 중소 30%, 중소 15%, 대 10%
국가전략기술 : (현행) 중소 16%, 중견 8%, 대기업 6% → (개정) 중소 35%, 중소 30%, 대 25%

●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 의원, 8.3)

-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3배 이내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,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 강화 등 근로기준 준수 규정 강화

●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 의원, 8.12)

- 원격근무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, 1주 간 8시간 범위에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체계 도입

●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 의원, 8.18)

-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시설에 휴게실을 추가하고, 건설근로자의 이용편리성 및 시설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

●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해철 의원, 8.4)

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자인 특정사업자를 지정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,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

●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 의원, 8.12)

-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행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

●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 의원, 8.17)

-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 및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며, 서면에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상승하는 경우 추가 발생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

●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 의원, 8.18)

-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사항에 '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'을 추가

●●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 의원, 8.18)

- 표준약정서에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게 하며, 위탁기업이 조정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

-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형자 의원, 8.4)
 -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, 특허단지 지정을 위한 인·허가 등의 신속처리, 전략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과 기반 강화 도모
-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, 8.31)
 -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 개선,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정 신설
-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 의원, 8.4)
 -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에서 수행 중 발생하는 산재사고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(현행 300만원 → 개정안 1천 5백만원)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 의원, 8.5)
 -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처분 수위를 강화하여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하도록 함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재 의원, 8.18)
 -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 의원, 8.24)
 -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,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,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
-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국 의원, 8.16)
 -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마련 및 건설엔지니어링 국내외 실적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
-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학용 의원, 8.19)
 -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선 의원, 8.18)
 - 반려동물에게 질병·사고·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하도록 함
-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찬민 의원, 8.11)
 -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변경이 예고되는 경우에도 하위 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비교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예방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 의원, 8.12)
 -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방식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당 법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

-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 의원, 8.17)
 - 부당한 표시·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, 관련 과징금을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
-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 의원, 8.22)
 -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법에 명시
- 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(백종헌 의원, 8.24)
 - 혁신제품 등의 안전성, 효과성, 품질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, 제품개발 초기 R&D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
-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병원 의원, 8.25)
 - 가맹본부의 식품위생 교육 의무화 및 가맹점사업자 대상 식품위생 프로그램 운영 및 식품위생 관련 기술·정보 제공 규정 마련
-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 의원, 8.19)
 - 전기차 등록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며,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·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등에 대해 사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 마련
-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 의원, 8.19)
 -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며,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근거 등을 마련
-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, 8.31)
 -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, 용기에 남아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배제
 - 유해화학물질 관련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주민 또는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서면통지, 개별 또는 집합설명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대상에서 제외